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21. 6. 25.(금) 총 5매 (본문 2, 참고 3)	
담당 부서	어촌어항재생과	담당 자	• 과장 김태경, 서기관 문미희, 주무관 한경희 ☎ 044)200-6170, 6174, 6195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담당 자	• 과장 박희민, 사무관 김영지, 주무관 이정민 ☎ (044) 201-3665, 3664
보 도 일 시		2021년 6월 28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 27.(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해수부-국토부, 어촌 인구감소 대응 위해 손 잡았다

- 어촌뉴딜-주거플랫폼 사업 협업으로 어촌 정주여건 개선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6월 28일(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어촌지역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어촌의 활력 제고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① 국토교통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②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300 사업* 등(생활SOC 공급)을 결합한 주거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 낙후된 선착장·대합실 등 어촌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통해 어촌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정부는 농산어촌지역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적 공간, 그리고 의료·교육·복지 등 생활 인프라가 결합(주거+일자리+생활SOC)된 ‘주거플랫폼’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주거플랫폼 사업을 통해 ‘일자리-인프라-사람’이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 주거플랫폼 사업 개념도 >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어촌 뉴딜300사업 지역 5개소를 선정하여 주거플랫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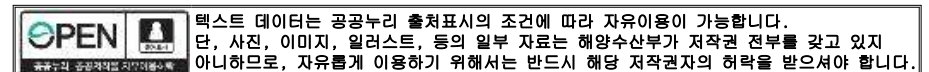
이번 협업을 통해 그동안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지원하지 못한 양질의 주택공급이 가능해져 귀어귀촌의 제약요인 중 하나였던 주거문제가 일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공모 시 주거플랫폼 계획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제출*한 지자체에게는 일정수준의 가점을 부여하고, 올해 말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 2022년 어촌뉴딜사업 공모 접수(2021. 9. 6.~10.) → 최종 대상지 확정(2021. 12.)

한편, 어촌지역은 주택 등의 인프라와 교육·문화·의료·복지 등 사회 서비스가 부족하고 정주 만족도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신규 인구 유입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탈어촌을 방지하고 새로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삶의 질 개선과 안전을 연계한 포스트 어촌 뉴딜 시범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농어촌 지역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주거플랫폼과 같은 균형발전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으로, 올해는 해양수산부와 협업 등을 통해 우수한 선도사례를 창출하여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어촌뉴딜을 통한 생활SOC 공급과 지역특화사업, 주거플랫폼을 통한 양질의 주택공급이 연계된 모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어촌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어촌지역 활성화 업무협약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이하 “양 부처”라 한다)는 국가 균형발전과 어촌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살기 좋은 어촌 만들기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하고, 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협약한다.

1. 양 부처는 어촌 지역의 활력제고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2. 양 부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어촌·어항의 통합재생, 주민복지를 위한 주택 공급,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SOC 확충 등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 가.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역개발사업 등
 - 나.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 사업, 농산어촌 개발사업 등
3. 양 부처는 이번 년도부터 어촌뉴딜300 사업지역을 대상으로 제2호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4. 양 부처는 협약 내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실무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2021년 6월 28일

(서명)
국 토 교 통 부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장 관

□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개요

- (개념)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생활SOC+일자리’를 연계하여 공급



□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목표

- (전략목표) ‘주택+생활SOC+일자리’를 패키지로 공급하여 농산어촌 정주여건 및 돌봄체계를 개선하고 신규 인구유입을 통한 활력 제고
- (정책대상) 기존 거주하는 고령자와 교육, 일자리 등을 목적으로 귀농·귀어·귀촌한 가구 및 은퇴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

< 구성요소별 추진주체 및 세부 내용 >

구 분	추진주체	관련 사업유형(예시)	재원부담
주거	LH 등	▶ 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창업지원주택, 마을정비형 등) ▶ 빈집 정비사업 등	▶ (건설) 시행자 ▶ (운영) 시행자 * 지자체 일부 부담
생활SOC	지자체	▶ 국토부(지역개발, 도시재생) ▶ 농식품부(농촌협약, 농산어촌개발 등) ▶ 해수부(어촌뉴딜, 농산어촌개발 등) ▶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등의 지원사업	▶ (건설) 지자체 ▶ (운영) 지자체 * 정부지원사업 연계
일자리	지자체	▶ 지역 산단, 일자리 기업 연계 ▶ 범부처 일자리지원사업 연계 ▶ 기타(생활SOC 운영 등)	▶ 지자체 * 정부지원사업 연계

붙임 3 어촌뉴딜 300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300개소 어촌·어항에 대해 낙후된 선착장·대합실 등 어촌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특화개발 추진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9~’24 (개소당 3년) * 총 300개소 : ‘19년 70개, ‘20년 120개, ‘21년 60개, ‘22년 50개
총사업비	약 3조원(국비 2조1천억원, 지방비 9천억원)
사업규모	어촌·어항 300개소(개소당 최대 150억원, 평균 100억원)
사업예산	(‘19년) 1,729억원, (‘20년) 4,344억원, (‘21년) 5,219억원
지원조건	지자체 자본보조(국비 70%, 지방비 30%)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어촌뉴딜 사업 예시

- 어촌 필수 생활 SOC공급(공통)+ 복지·소득증대(특화) +주민역량강화 사업으로 구성 ⇒ 국토부 협업 주거플랫폼을 통해 양질의 주택공급

구분	세부 사업 예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공통사업	기항지 개선	여객선 계류시설	부잔교, 선착장 등 여객선의 접안을 위한 시설
		여객 편의시설	여객터미널, 매표소, 화장실, 공원 등
	어항시설 정비	외곽시설	방파제, 방사제, 파제제, 방조제, 도류제, 수문, 갑문, 호안, 돌제 등
		계류시설	안벽, 물양장, 선착장, 부잔교, 선양장 등
		기능편의시설	도로, 주차장, 어선건조·수리장, 어구건조·수리장, 선양시설, 야적장, 기자재 창고, 어구·어망창고, 공동작업장, 보급시설 등
		안전시설	CCTV, 일반 조명시설, 안전난간, 인명구조함, 안내(경고)표지판, 위치표지판, 불라드, 차막이 등
		기타 어항시설	준설 등
특화사업	지역특화시설	특화시설	지역의 문화·예술·역사 등을 반영한 해당지역만의 고유시설
	문화·관광시설	문화·복지	주민복지센터, 어민회관, 귀어귀촌인의 집 등
		경관개선	마을안길 정비, 경관 조명 등
	지역 소득증대	주거개선	지붕 및 주택 개량 등
		소득기반	민박, 수산물 직판장, 어부장터 등
S W 사업	역량강화	레저·체험	해양생태 놀이터, 체험휴양마을센터 등
		휴식·휴양	해안풍경길, 산책로, 힐링마당, 수변공원 등
		교육	-
		홍보	-
	지역협의체 운영	마케팅	-
		고용창출	-

붙임 4 어촌뉴딜300사업 조감도

